

광주 학동 참사 3주기 앞두고 추모 공간 조성 합의

재개발 조합·유족 측 이견 좁혀 사고 지점서 300m 떨어진 외부 희생자 상징 나무 9그루 등 조성

지난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붕괴 참사로 숨진 시민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된다.

참사 이후 추모 공간 부지 선정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재개발 조합과 유족 측이 오는 6월9일 3주기를 앞두고 사고지점에서 약 300m 떨어진 외부에 추모 공간을 만들기로 최종 합의했다.

4일 광주시와 동구 등에 따르면 학동 참사 유족과 재개발 4구역 조합, 현대산업개발(현산)은 다음달 9일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최근 추모 공간 조성 합의했다.

조합 측이 아파트 부지 내 조성에 반대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추모공간은 결국 유족 등과 협의를 통해 사고지점에서 약 300m 떨어진 천변 연결 녹지 부근에 만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붕괴 참사 2주기였던 지난해 6월9일 오후 재개발 4구역 내 참사 현장 주변에서 열린 2주기 추모식에서 이진의 유가족 대표가 추도사를 낭독하고 있다. 전남일보 자료사진

들어진다. 해당 부지는 오는 2026년 완공 될 학동행정복합센터 인근이기도 하다.

추모 공간은 유족 측이 추모의 의미나 성격이 드러나지 않도록 요구함에 따라 해당 추모 공간은 녹지 공원 형태로 조성

될 예정이다. 참사 발생 2년 9개월만에 조성되는 추모공간에는 희생자 9명을 상징하는 나무 9그루가 심어지며, 광장 바닥에 참사를 기리기 위해 '시간의 순환'을 의미하는 4

개의 원판을 놓을 계획이다. 추모 공간은 아파트 준공과 함께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매몰된 운림 54번 시내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은 추가 논의 중이다. 유가족의 보관 요청에 따라 사고 차량은 북구 각화정수장에 보존되고 있으며 광주시와 현대산업개발은 이를 존치하거나 녹여서 조형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유족과 조합은 추모 공간 부지 선정과 관련된 논의 진통을 겪어왔다. 유족들은 사고 발생 장소인 조합 안쪽 부지를 별도로 추모 공간으로 조성하자고 주장해 왔다.

반면 조합은 설계변경이 뒤따르고 자신들 또한 시공사의 잘못에 따른 공기 연장 피해자라는 점을 들며 유족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양측의 이견은 지난해 3월 유족과 조합이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추모 공간 조성을

둔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과 함께 좁혀졌다. 이후 참사 3년여만에 최종 합의점을 찾게 됐다.공간 조성 부지와 비용은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부담한다.

현재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학동 633-3번지 일대 12만 6433㎡에 지하 3층, 지상 29층, 19개 동, 2314세대 규모로 추진 중이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지 내에는 철거 대상 건물 594개동 중 학동주민센터와 남광교회 내 교육관 2개만 남아있으며, 이르면 오는 6월쯤 철거공사는 마무리 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께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착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유족들은 오는 6월9일 오후 4시20분 광주 동구청 청사 앞에서 3주기 추모식을 갖는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못다 핀 간호사 꿈...' 12사단 훈련병 눈물의 영결식

100여명 참석... 사단장 "깊이 애도" 경찰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속도

"배려 깊고 친절했던 모습, 영원히 기억할게..."

강원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훈련병 박모(22) 일병의 영결식이 고향 나주에서 치러졌다.

조우재 육군 12사단장과 군 관계자, 유가족·친구 등 100명이 참석한 영결식에는 사단장, 친구들의 추모사와 군 장병들의 헌화가 이어졌다.

박 일병의 친구는 조사를 통해 "환하게 웃는 친구의 모습을 더는 보지 못해 가슴 아프다"고 울먹였다.

조 사단장도 추도사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눈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가족과 행복한 추억을 간직한 친구들에게 전 장병의 마음을 모아 깊이 애도한다"며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했던 명예로운 군인이었다"

고 추모했다.

순직 군인에 대한 예우로 3발의 총성이 울리고 관이 운구차에 실리는 동안 유가족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오열했다. 거수경례를 받으며 영결식장을 떠난 박 일병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앞서 지난 23일 박 일병은 신병교육대에서 벌점을 받은 동료 훈련병 5명과 완전군장을 한 채 군기훈련을 받던 중 열사병으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박 일병은 중환자실서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건강이 악화, 이를 만인 25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육군수사단은 해당 부대 중대장과 간부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28일 강원경찰청에 이첩했다. 경찰은 군인범죄전담수사팀과 의료사고전담수사요원 등 10명으로 수사 전담팀을 꾸려 수사, 다음날인 29일 박 일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은 동료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정성현 기자

전남대·조선대 의대 70% 지역 학생 뽑는다

지역인재 각 130명·100명 광주·전남·북 고교생만 지원 가능

전남대와 조선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한 가운데 10명 중 7명을 지역 내 학생들로 선발하기로 했다.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남대 의대가 정원 내 모집인원 163명 중 80%인 130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130명 중 106명은 수시, 24명은 정시로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조선대는 150명 중 67%인 100명을 해당 전형으로 뽑는다. 이 중 72명을 수시, 28명을 정시 선발할 예정이다.

지역인재전형은 광주와 전남·북 소재 고등학교를 3년 내내 다닌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다.

호남권은 전체 의대 모집인원 대비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약 70%에 달하며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뒤이어 △부산

·울산·경남 65.7% △충청 63.6% △대구·경북 62.1% △제주 50.0% △강원 37.6%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 단위로 보면 비수도권 대학 26곳은 내년도 의대 신입생 중 61.5%(정원 내 기준)를 지역인재 몫으로 둔다. 전년 대비 9.7%p 오른 수준이다.

일각에선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지방의대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절대적인 학생 수가 적은 만큼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최상위권 학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 측은 "수시 미달 인원을 정시로 전환할 수 있어 미달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따라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 내·외 전체 신입생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강주비 기자



광주퍼포먼스아트계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 회원들이 30일 광주 동구 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사건 관련 엄중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 예술·여성단체 "문화예술계 성폭력 엄중 수사해야"

"권력 이용해 2차 성폭력 가해" 예술계 특수성 고려한 수사 촉구

광주 예술·여성단체가 문화예술단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퍼포먼스아트계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대책위)는 30일 광주 동구 동부경찰서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뿐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광주 문화예술 공모사업 프로젝트에서 남성 예술감독이 여성 구성원을 두차례 성폭행·추행했다는 고소장이 동부경찰서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됐으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

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책위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는 성별·직책·경력·인적 네트워크 등 권력의 차이가 있었다"며 "이 사건은 감독의 위계로 여성예술인을 성폭력한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피해자는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축하하는 자리에서 성폭력 피해를 봤다"며 "피해자는 공동 프로젝트에 끼칠 영향, 자신을 향한 낙인 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연고가 없고 오랜 경력 단절로 문화예술 작업을 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해당 프로젝트는 경력을 다시 이어가게 될 희망의 초석이었다"며 "가해자는 사과나 반성도 없이 피해자의 상황과 마음을 이용해 재차 성폭력을 자행했

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동부경찰서는 가해자와 그 지지자의 주장을 우선 채택해 불송치 처리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성폭력은 아니라는 불송치 이유서는 수사관의 성인지 감수성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위력뿐 아니라 밤늦게 이뤄지는 작업과 회의를 진행하는 등 집단 창작 환경인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수사해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해당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며 동부경찰서에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글·사진=정성아 기자

'선거법 위반' 이상철 곡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군수직 상실

선거운동원에 거액 식사 제공

군수 당선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고액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사진)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지인이 결제한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이 인정되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참석자 1명당 8만원 상당의 비교적 큰 금액인 식사 접대가 있었고 참석자들이 각자 식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연출했다. 이 군수의 가담 정도가 소극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은지 기자